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논술시험(인문 1)

< 2018. 11. 17(토) 09:00 인문계 1교시 >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전형
수험번호	성명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전면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논술시험 (인문 1)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7>은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0점)

<제시문 1>

부와 소득 불평등에 관한 어떤 경제적 결정론도 경계해야 한다. 부의 분배는 언제나 정치적 요인이 결부되어 있는바 순전히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환원될 수 없다. 예컨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910년에서 1950년 사이에 불평등이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들이 불러온 결과였다. 이와 비슷하게 1980년 이후 불평등이 다시 커진 것은 대체로 지난 수십 년간 나타난 정치적 변화, 특히 조세 및 금융과 관련된 정책 때문이었다. 불평등의 역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들이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부당한지에 대해 갖게 된 견해들, 이 행위자들 사이의 역학관계,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집합적 선택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역사는 불평등이 모든 관련 행위자들이 함께 만든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는 자연적이고 자생적인 과정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제시문 2>

중요한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해 대중들이 희생한 대가로 달성된 것이 아니라 자유분방하고 생산적인 천재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창출되었다. 그들은 국가의 산업화를 위해 국민들을 결코 굽기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 높은 임금, 새로 발명한 기계 및 모든 과학적 발견,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생산한 값싼 상품들을 공급했다. 그 결과로 국가 전체가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개인이 혜택을 입었다.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오류를 범하지 말자. 도덕적 목표나 의무감을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고도 국가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가의 선은 결과이고 그 원인은 자신의 목표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이다. 자본주의는 인간 권리를 보장해 준 결과 때문이 아니라 인간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그 사실 자체로 정당화된다. 자유 시장에서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경제 행위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이 수요-공급법칙의 도덕적 의미이다. 그것은 약의에 찬 두 가지 교의인 집단주의와 이타주의를 전적으로 거부하며 인간은 재산이 아니고 집단의 노예도 아니라는 사실 및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긍정한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합리적인 사리사욕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만일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기를 원한다면 서로 동일한 가치를 교환해야 한다고 본다(여기서 동일하다는 것의 유일한 기준은 거래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강요되지 않은 판단이다). 이타주의는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위해 봉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능력 있는 자들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지성으로부터 보상을 강탈하려고 하며, 집단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의 창출 과정에서 개인의 지성이 수행하는 역할을 전면 부인한다.

<제시문 3>

포괄적인 재분배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도덕적으로 선호되는 국가, 도덕적으로 용인되는 합법적인 국가는 몽상가들과 공상가들의 유토피아적 열망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국가이다. 최소국가는 우리를 불가침의 개인들로 취급한다. 즉 우리는 이 국가 안에서 타인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도 도구나 수단, 자원으로 이용될 수 없다. 최소국가는 우리를 권리를 소유한 존엄한 인격으로 취급한다. 우리의 권리들을 존중함으로써 우리를 존중해주는 최소국가는,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목표와 스스로가 바라는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와 동일한 존엄성을 지닌 다른 개인들의 자발적인 협동의 도움을 받는다.

<제시문 4>

'붉은 깃발법'으로도 널리 알려진 영국의 기관차법은 1865년 제정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다.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 최고 속도를 시속 3킬로미터(도심 기준)로 제한하고,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자동차의 최소 55미터 앞에서 차가 오는 것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붉은 깃발법'은 마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지만, 사실은 당시 자동차의 출시로 위협을 느낀 마차업자들과 기차산업 종사자들이 정치적 로비를 벌인 결과였다. '붉은 깃발법'은 이후 약 30년간 유지되면서 영국의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였는데, 그 결과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은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변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논술시험 (인문 1)

<제시문 5>

자유 시장 체제는 경제의 전반적인 추세를 규정하거나 공정한 기회 균등을 위해서 불가결한 사회적 여건을 제공하는 정치·경제적 제도 체계 내에서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입장도 결점이 있다.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능력과 재능의 천부적 배분에 의해 부나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것을 허용한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역사적·사회적 행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부적 재능의 분배에 의하여 소득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기회 균등의 원칙은 가족 제도가 존재하는 한 오직 불완전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천부적 능력이 계발되고 성숙하는 정도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여건과 계급 양태에 영향을 받는다. 노력하고 힘쓰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욕 그 자체까지도 행복한 가정 및 사회적 여건에 달려있다. 실제로 있어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술 습득과 교양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천부적인 운수가 미치는 자의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제시문 6>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일, 경쟁이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경쟁을 대체하는 일, 그리고 거대 사회에 매우 유익하지만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들이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이윤이 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이 일들은 확실히 국가가 해야 할 분야들이다. 국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체제는 없다. 효과적인 경쟁체제는 현명하게 제정되고 지속적으로 조정되는 법적 틀을 필요로 한다. 경쟁이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사기나 (무지한 사람에 대한 착취를 포함한) 기만을 방지하는 것에 국한된다. 이것은 완벽하게 성취된 적은 없지만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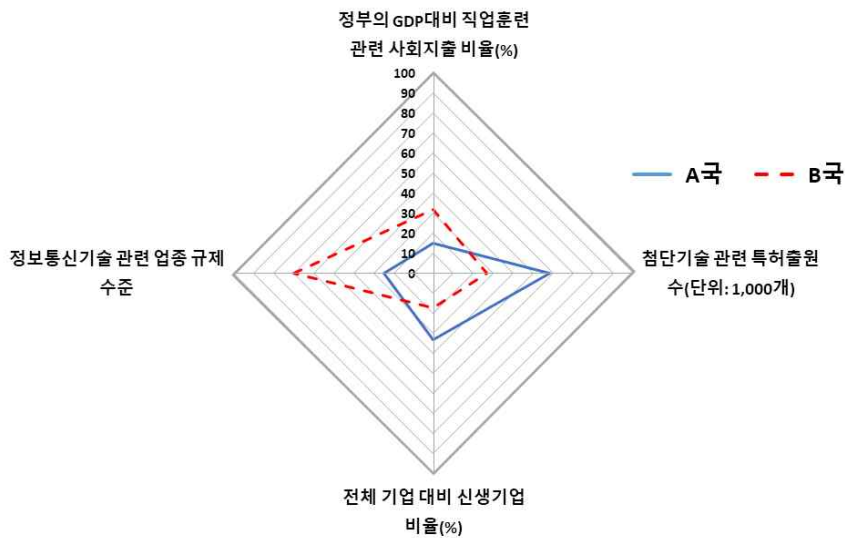
<제시문 7>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들어 유럽 지역 대부분을 위협한 경제 붕괴와 사회 혼란을 겪으면서 대중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제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안정과 공동체, 사회적 보호를 다시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가 등장했는데, 그들은 점점 깊어지는 나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의 출구를 제공했다. 그것은 국가를 통해 시장이 제자리에 복귀되고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근대성이 만들어낸 원자화, 뿌리 뽑힘, 사회적 불화가 극복된 새로운 사회의 비전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는 시장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그러나 폭력적인 해결책을 의미했다. 두말할 필요 없이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라는 치료법은 (그들이 치료하겠다고 나선) 원래의 병보다 더 나쁜 것이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겪고 난 이후의 유럽인들은 시장의 지나친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고 사회적 연대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고자 했다.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라는 해결책이 수반했던 민주주의의 희생과 자유의 유린 없이 말이다.

논술시험 (인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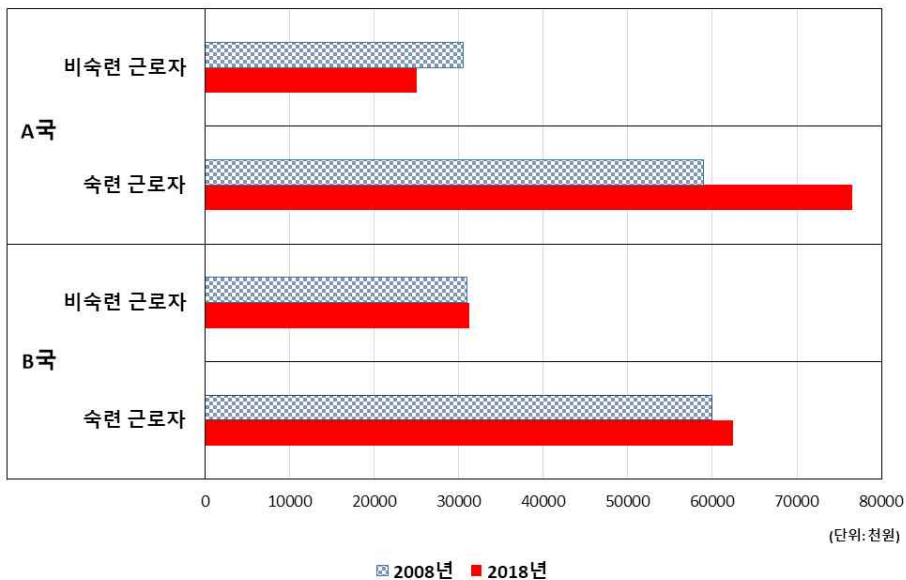
[문제 2] 지난 10년 간 국가 A와 B에서는 산업의 자동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자료 1>과 <자료 2>를 연계하여 해석하고, 국가 A와 B가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40점)

<자료 1> 주요 사회경제 지표(2008-2018년 평균)



주)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종의 규제 수준 0은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 100은 완전한 규제 상태를 가리킴

<자료 2> 근로자 1인당 평균 실질 연소득



[문제 3] 현재 C국에서는 로봇세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이다. 로봇세란 생산과정에서 일상 근로자(정해진 일상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절차가 정해져 있어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인력)를 대체하는 산업용 로봇의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택하여 로봇세 도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견해 중 하나만을 논술하시오.(30점)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논술시험(인문 2)

< 2018. 11. 17(토) 13:00 인문계 2교시 >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전형
수험번호		성명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전면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논술시험 (인문 2)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6>은 법치주의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30점)

<제시문 1>

섭공: 모처럼 먼 길을 오셨으니, 오늘은 제가 선생님께 정치를 하는 바른 도리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공자: 허허, 공께서 그리 청하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까이 사는 백성들이 늘 기쁜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십시오.
 섭공: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백성들은 모두가 기뻐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공자: 그렇다면 멀리 사는 사람들이 공의 덕을 흠모하여 가까운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섭공: 아니, 이거 부끄럽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층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치란 백성을 기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을 올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정치(政治)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치(正治)인 것이기도 하지요.
 섭공: 예, 부끄럽지만 저는 백성을 바르게 이끄는 일에서는 아주 자신합니다.
 공자: 그거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공께서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바르게 이끄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섭공: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잃은 양이 자기 집에 들어오자 시치미를 뚝 떼고 제 것인 양 쳤습니다. 물론 이웃은 고발을 했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관청에까지 나와 “국법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제 아버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는 아버에게 벌을 주고 아들에게는 상금을 주어 처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을 바르다고 말합니다. 그 젊은이는 국법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 젊은이는 가족이라는 사적인 관계보다 공적인 것을 더 먼저 생각한 것이니 장하지 않습니까? 법이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군주라 해서, 아버지라 해서 숨겨주고 덮어준다면 그게 어찌 법이겠습니까?

<제시문 2>

법률 체계에 근거하여 권위자가 내리는 판결은 지금까지 선보인 폭력 감소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고 일반적이다. 우리는 사형이나 아니면 중신형이나 같은 행형 정책의 차이에 따라 폭력이 몇 퍼센트 감소할 수 있는가를 놓고 논쟁을 하지만, 무정부 상태에서 사는 것보다는 사법 제도가 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른 사람의 손에 죽는 남자의 비율이 많게는 60퍼센트에 달했던, 국가 이전 사회의 놀라운 살인 사건 발생률이 한 증거이다. 또 다른 증거는 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는 거의 항상 폭력적인 문화가 출현한다는 사실이다. 중세 이후 유럽 사회의 살인 사건 발생률은 이전의 100분의 1로 감소하였다. 사람들은 종종 그 원인을 정의나 인권, 상호존중, 평화와 같은 가치들이 계몽을 통해 확산된 것에서 찾는다. 물론 그러한 요인들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보다 그러한 가치들을 앞에 내세우는 것이 더 큰 분쟁을 부추긴다. 한쪽에서는 정의롭고 명예로운 것으로 보는 것을 다른 쪽에서는 불평등과 불명예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에 일어난 폭력감소의 결정적인 원인은 강력한 법 집행력을 가진 중앙집권적 권력의 성장이었다.

<제시문 3>

‘안티고네’는 테베 지역에서 전해져온 전설을 소포클레스가 재구성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은 테베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골육상잔을 벌이다가 모두 죽게 되고, 결국 가까운 친척인 크레온이 왕위에 오른다. 죽은 두 아들 중 폴리네이케스는 권력 다툼을 벌일 때 아르고스로 도망해 그곳 왕의 부마가 되어 테베를 공격했던 인물이다. 이 반역 행위 때문에 크레온은 그의 매장을 금지한다. 그러나 여동생 안티고네는 죽은 혈족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천륜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빠의 장례를 거행하고자 한다. 크레온은 국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안티고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석굴에 가두자 안티고네는 이에 죽음으로써 항거한다. 결국 안티고네의 약혼자였던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 역시 죽음으로써 안티고네를 따르고, 왕비 에우리디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에 대해 크레온은 극에서 “아아! 슬프도다. 불행한 내 결정이여! 아아! 정의가 무엇인지 나는 불행을 통해 배웠소.” 라고 탄식한다. 소포클레스의 작품은 윤리적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실정법에 집착하려는 크레온의 국가지상주의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는 현대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논술시험 (인문 2)

<제시문 4>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지배를 지칭하는 ‘인(人)의 지배’를 배척하고, 국가권력을 법에 구속 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법치주의에서는 형식적인 합법성이 크게 강조되어, 행정과 재판이 법률에 적합하기만 하면 그 법률 자체의 목적이거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법률을 도구로만 이용한 합법적 지배, 즉 외형상으로는 통치의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정당성이 결여된 법률지상주의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입장은 독일 나치의 통치와 같은 다수의 횡포와 독재를 옹호하는 논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와 헌법 이념에 합치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대두하였다.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에 들어맞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의 실현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고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시문 5>

각 국가마다 사람들은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에 따라 사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민주정체에서 사는 사람들은 민주적인 법률을, 참주정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주체제의 법률을,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정치 체제들에서 사는 사람들도 나름의 법률을 만들어 살아간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나름의 법을 만들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국가에 질서를 유지합니다. 물론 어떤 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도 ‘모든 경우들’을 미리 고려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종종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정해진 법 이외 다른 근거를 들어 국가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려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간혹 천성적으로 공적인 것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맞게 잘 판단할만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정해진 법률을 따르는 것보다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현자’는 찾기 힘들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그런 사람에게 정해진 법보다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게 되면, 그는 결국 탐욕에 휩싸여 사익을 추구하고 나라를 온갖 악으로 가득 채우기 십상입니다. 각 정치 체제가 정해놓은 법령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결국은 최선입니다.

<제시문 6>

법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만들어졌거나 최소한 국민들이 법에 동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의회가 만든 법률은 과연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단순다수결은 일반의지의 반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법의 내용이 국민의 대표자 51퍼센트 다수에 의해 결정되면, 나머지 49퍼센트 국민에게도 마찬가지로 합의에 의한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가? 의회에서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한 표결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정당성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인가? 우리는 마치 절대 변화하거나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는 듯이 법률을 ‘철(鐵)’칙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인간이 만든 것에 변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법률도 그러하다. 어떤 법률도 ‘철’칙이 아니다. 법률은 인간이 만든 평범한 규칙에 불과하다. 우리는 당연하고 필수적인 것처럼 주장되고 받아들여졌던 법률이 사회의 문화적, 윤리적 가치가 변하면서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의심받게 되고 결국 다른 법률로 대체되는 것을 역사에서 자주 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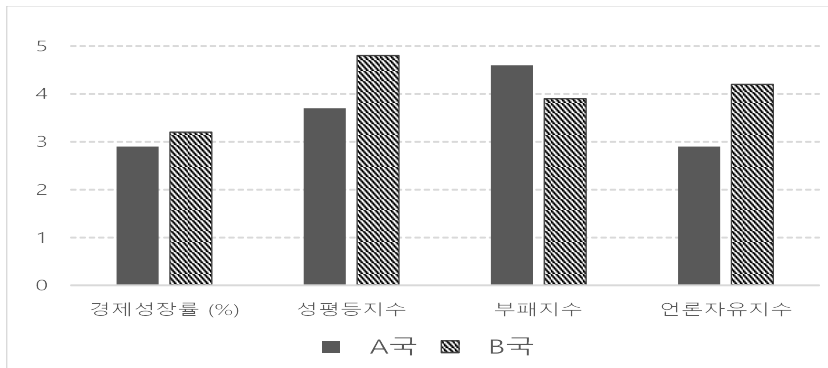
논술시험 (인문 2)

[문제 2] <자료 1>과 <자료 2>를 연결시켜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한 입장을 옹호하십시오.(35점)

<자료 1>

조사문항	국가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법과 도덕은 구분되어야한다	A	27.3	51.4	18.4	2.9
	B	9.8	32.1	42.3	15.8
법대로 살면 손해다	A	12.8	34.5	40.3	12.4
	B	13.1	32.9	41.1	12.9
국민참여재판제도 (배심원제도)가 필요하다	A	6.7	28.4	45.4	19.5
	B	10.2	42.1	34.8	12.9
일단 정해진 법은 반드시 지켜야한다	A	13.6	44.7	34.5	7.2
	B	10.2	35.6	36.5	17.7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소급입법도 할 수 있다	A	4.5	24.8	52.1	18.6
	B	17.9	43.1	29.4	9.6

<자료 2>



- 주1) 모든 통계자료는 지난 10년간 평균 수치이며, 다른 모든 조건은 두 국가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주2) <자료 1>은 법 인식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이다.(단위: %)
- 주3) <자료 2>에서 경제성장률 외의 다른 지수들은 모두 5점 만점 척도로 측정하였다.(5=높음, 0=낮음)

[문제 3] <보기>에서 언급된 '동물해방전선' 회원들의 현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그들을 기소, 처벌하려는 원고 측의 입장과 그들의 행위를 변호하려는 피고 측의 입장을 [문제 1]의 입장들과 연관지어 각각 논술하십시오.(35점)

<보기>

영국에는 무분별한 동물 남용과 학대에 반대하여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벌이는 동물해방론자들의 단체가 있다. '동물해방전선(Animal Liberation Front)'과 '동물학대방지왕립협회(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가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의 회원들은 식용고기의 생산을 위한 공장식 농장, 모피공장, 사냥터, 동물실험실 등에서 행해지는 인간에 의한 동물학대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 특히 '동물해방전선' 회원들은 동물학대에 대해 항의서를 제출한다거나 데모를 벌이는 등의 간접적이고 평화로운 방법 대신에 보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투쟁한다. 그들은 모피공장을 습격하여 그 안에 있던 동물들을 풀어주거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실을 파괴하기도 한다. 또 한 번은 바다표범을 잡으러 나갈 예정인 배에 구멍을 내서 그들의 생업을 방해한 적도 있다. 그 회원들은 비록 다른 생명들에게, 그들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재산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결국 다수의 회원들이 체포되었으며, 법정에 서게 되었다.